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성진



녹색뉴딜사업의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강 살리기와 무관한 토목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또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자력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높여 핵발전 초강국을 건설할 생각이 다.

현재 2.4%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그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축소, 폐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자전거타기를 홍보하면서 소위 자전거고속도로라는 것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현주소이다.

정부주도 녹색성장의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는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여전히 가장 주목받는 정책 아젠다로 통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해온 녹색사회란이 그간 별로 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한 것에 반해 유독 토목건설위주의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정부의 녹색성장개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건 언뜻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지독한 성장중독증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단기간에 엄청난 속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세계 11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둔벼락을 맞아서일까? 이런 저성장의 선진국 경제유형으로

성장의 덫에 갇힌 사회

접어들고 있는데도 사회는 여전히 발전페러다임의 전환을 거부하고 성장과 소비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본의 탐욕이 심해져 소중함 정치, 사회적 가치들을 버리고 물질만능주의의 천박함에 지배당하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었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벌고 쓰며 쉽게 버리는 재미를 더 키우고 싶은 욕망이 대통령을 뽑는 기준조차 오로지 경제에만 두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도의 양적 성장 사회를 변형으로 인도한다고 믿어왔다. 경제제 수입의 증가 그 자체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더욱 부유하고 향상된 삶의 질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

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촌 전체를 보아도 성장은 분명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바로 그 이익이 불공평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세계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구 전체 수입에서 겨우 2%만을 벌고 있다. OECD국가들의 부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양극화 현상은 20년 전보다도 더 악화되었다. 부가 소수에게 흘러들어감으로써 성장은 오히려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환경성 문제는 지금까지 고수해온 변영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더해주고 있다.

경제평창은 자원의 소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영향은 이미 자연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도가 되었다. 20세기 마지막 25년의 기간 동안 지구촌경제는 두 배로 성장했으나 지구구의 생태계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인 60%가 파괴되었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년 수준에 비해 40%나 증가했으며 석유와 같은 주요 에너지의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90억의 지구촌사람들이 모두 OECD국가와 같은 수준의 풍요를 누리려면 2050년까지는 현재보다 15배, 그리고 금세기 말까지는 40배 더 큰 경제규모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어

떤 모습을 띠고 어떻게 운용될지를 생각해보자면, 성장을 통해 지구촌이 공평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룬다는 게 가능한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성장론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반(反)성장이 사회적 안정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창조적 발전모형을 수립해야만 한다.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무분별한 소비패션을 억제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는 지속적인 소비의 증가에 의존하고 있어 스스로가 '소비주의의 새장(iron cage of consumerism)'에 갇혀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는 소비가 증가하고 유행성이 풍부해져야만 경제가 계속 유지되거나 성장할 수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와 탐욕에 놓여있다. 끝없이 소비증가를 자극하는 경제체제의 전환과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한국의 미래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말짱한 감을 파헤치고 산을 허물며 도로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미래사회의 창조를 위한 바람직한 성장의 재규정이 시급한 때이다. (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엑스포 준비상황 재점검할 때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 유치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박람회 참가국 유치교섭이 시작된 이래 중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 이 참가를 공식 통보했고 UN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참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100개국 및 5개 국제기구 참가 확보의 전망이 매우 밝아졌다.

그러나 참가국이 많다고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최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준비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동안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공포와 함께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종합기본계획안이 마련되는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갖춰졌다.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도 비교적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따를 민자유치 실패가 여수

엑스포 성공개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자유치 중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도 경제 여건악화 등으로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호텔 건립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호텔 신축규모가 크게 줄어든데다 신규 투자자 유치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의지마저 퇴색하고 있어 나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주요 시설사업까지 민간에 개방키로 해 박람회 지원예산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1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남해안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얼마남지 않은 준비기간을 잘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정부도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소규모 학교 구조조정만이 능사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영세 사립 중·고교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학교 대부분이 이미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 수가 줄어든 농어촌 지역에 몰려 있어 부실 사립 해산이 지역 공교육 여건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교과부는 19일 학생 수 격감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곤란한 영세 중·고교 사립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에 요청했다. 학생 수 100명 미만인 영세 사립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각종 지원을 해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영세 사립 중·고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8년 기준 100명 미만의 영세 사립 중·고는 전국적으로 88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11개교가 전남에 몰려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982년부터 진행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많은 지역 농

어촌 학교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 중·고까지 자취를 감춘다면 농어촌의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이는 농촌인구 감소로 이어질 게 뻔하다.

물론 통폐합의 명분은 분명하다. 학급 편성이 힘든데다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지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에 학교가 사라지면 농촌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간과 해선 안 된다.

지방의 소규모 학교가 사라질 경우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역차별 교육정책이며 농어촌의 황폐화를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골학교가 가장 건강한 친자연적 교육공간임을 알아야 한다.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의 획일적인 구조조정만이 최선, 최고의 방법인 지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단식(斷食)은 그리 눈에 잘 띄지 않는 풍경이다. 정치인들은 원내와 장외투쟁을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과 소신을 관철하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끔 단식을 감행한다.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단식은 과거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우리 국민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았던 단식의 기억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일 것이다. 그는 1983년 5월 18일부터 민주화 5개 항을 내걸고 23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은 당시 신군부 강압정치의 공포 속에서 야권의 결속을 불러왔고 향후 한국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귀중한 씨앗이 되었다.

또 하나 각인돼 있는 기억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인 지난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여론의 내각제 시도 포기를 요구하며 13일간 단식농성을 벌여 마침내 그 뜻을 이뤄냈다.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다. 단식은 10일간 계속됐고 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고서야 최 전 대표는 단식을 풀었다. 그를 위문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뚝으면 죽는 데이'라는 '명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2007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에 반대하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친 채 25일간 단식을 했다. 정치인으로서는 천 의원이 가장 오랫동안 단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관련법 처리에 맞서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19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입맛대로 미디어법이 흘러가면 "죽기 살기로 막겠다"고 공언해 온 정 대표가 단식으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IT 시대에 여야 대화가 막혀 민주화투쟁의 상징인 단식이 재등장했다는 사실이 착잡할 뿐이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

단식(斷食)



NGO 칼럼

박정민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 3가지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참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세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야 하는데 나누지 못한 것으로 마음 아파한다고 합니다.

나눔은 자신의 삶을 후회 하지 않게 합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누는 미덕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눔으로 우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에 나눔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현재

무에 회사, 가정, 동네, 아파트에서 조금만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봅시다. 그러면 주변에 여러분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금방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져서 밝아질 것입니다.

필자가 과거 치과진료를 대가하던 중 어느 대형 교회의 전도지에 실린 글을 감명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5월 한 주일을 택해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는 날'로 정하고 이날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분들은 승용차 대신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불경기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하고 있는 터라 삶의 바닥에서 고생하는 이들

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었습시다.

교회 신자들은 택시 기사분에게 요금을 낼 때 거스름 돈을 받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교회와 거리가 멀어 택시 요금이 부담스러운 신자들은 중간쯤에 승용차를 세워둔 뒤,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도록 했습니다.

택시가 교회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던 봉사자들이 "택시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헌내세요."라며 기사에게 물 한 병을 건넵니다. 신자들이 요금을 내며 잔돈은 받지 않으니 택시 기사분께서는 적잖이 놀라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배려는 소의 계층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준다는 내용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나눔과 배려를 통해 세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합시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아픈 마음이나 후회로 살았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되도록 나눔과 배려를 실천합시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前 광주 남구 장애인협회 회장〉

기고

염찬수



노인의 하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아침 자리에 일어나 오늘 뭘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시작일 것이다. 노인에게 할 일이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노인은 열정이 있어도 이미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름의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은 살아있다. 그렇다면 이를 실천해 나갈 때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노인들은 갈망한다. 할 일을 주라고.

노인들의 관심사는 더욱 즐겁다. 1천 원 짜리 식사가 정말 정성과 맛이 어울려져 만족감이 있었다. 하루 식비가 무려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놀랐다. 여기

바로 여기가 우리들이 노래와 춤과 그리고 회식을 얻는 만남의 자리다. 노후에 희망과 용기를 퍼주는 안식처.

어느 노인이 한마디 던졌다. "천국이 따로 없네요."라고, 그리고 세상 살맛난다고 까지 덧붙인다.

이용시설은 문화관, 체육관, 복지관, 수영장, 컴퓨터, 바둑교실 등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떤 노인이 와도 한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노인들의 관심사는 더욱 즐겁다. 1천 원 짜리 식사가 정말 정성과 맛이 어울려져 만족감이 있었다. 하루 식비가 무려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놀랐다. 여기

빛고를 노인 건강 타운 가보니

은 비율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 시책도 복지국가 건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급선무다.

지난 6월 10일 빛고를 노대동 자리에 '노인 복지 건강 타운'이 그 위용도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시야에 펼쳐진 타운은 넓은 초원에 푸른 산이 에워싸인 그야말로 별천지다. 노인들은 한결 같이 기뻐한다.

"활기찬 웃음으로 가득한 어른 세상, 건강한 에너지로 만나는 열정의 세상, 그리고 세계 최고 노인 복지타운"이라는 구호도 보인다.

참으로 무료한 노인들에게는 이 얼마나 환영받는 일인가?

빛고를 노인들 너 나 없이 여길 찾는다. 한결같이 표정이 밝다. 어쩌면 여렸을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설레면서 기쁜 걸음으로 찾아 오는지도 모른다. 아,

종사원은 자원 봉사자(350명)로 이루어져 한결같이 술선하는 모습이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했다.

우리 고장에 이 같이 자랑스럽고 훌륭한 시설이 있다는 것이 자부와 긍지를 느낀다. 이제 노인들에게는 갈 곳이 있고는 할 일도 생겼다. 한마디로 살맛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빛고를 노인 복지재단 사무처 원장은 "노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보답하겠다"라고 말한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빛고를 노인 건강타운을 신명나고 행복한 실버문화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약속들은 꼭 지켜질 것이다. 필자도 노인들과 함께 환호를 보낸다. 마치 나의 행복이 여기에 있듯 것처럼 말이다.

어르신 여러분! 또 내일 건강타운에서 그 열정을 꽃피우세요. (한국기원 전문기사)

무등산 옛길 복원, 명칭 등 좀 더 신중했어야

무등산 옛길을 복원해 주말마다 증심사로 넘쳐나는 산행객들을 분산시키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줘 고마운 마음이 든다. 개방 이후 한두 번 원호사까지 가는 길을 걸어보았다. 복원하며 고생한 것을 생각하며 참 좋은 길을 만들었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길 명칭을 보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무등산老路라니. 지금은 구로라고 바뀌었지만 조금 정성을 들여 이름을 지어야

했다. 외국인들도 간간히 보이던데 흑 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싶다.

며칠 전 다시 전말대(4수원지) 길을 걸었다. 동문성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길이 약 1km 정도 시작되었는데 옛길을 복원해 놓고 다시 옛길이라며 새 길을 만든 것은 실망스럽다. 예산남비를 하지않았는지 짚어볼 일이다. 또 탐방객들에게 관한 일로 비난받을까 우려스럽다. ▲이건희·광주시 동구 산수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 치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 회 1 부 2200-612	조 사 부 2200-571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